

충남 재생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전환

2016. 9. 2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

1. 충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 제시

- 전국 석탄화력 53개의 절반인 26개가 충남에 위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
-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와 온실가스 배출 현실 적극 강조

2. 충남 차원에서 석탄화력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

1)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

-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(배출허용기준) ③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(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,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)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(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)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21., 2012.5.23.>

-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(환경기준의 설정) ③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·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(이하 "지역환경기준"이라 한다)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2) 고체연료 사용제한 강화

-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(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)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·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현행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: 1.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. 경기도 중 수원시, 부천시, 과천시, 성남시, 광명시, 안양시, 의정부시, 안산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, 구리시, 남양주시

3. 충남 석탄화력 3기 줄이기 사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

- 서울시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을 '원전 하나 줄이기' 사업으로 추진
- 충남의 석탄화력 줄이기 사업은 홍보 부족으로 도민 인지도 낮은 상황
- 석탄화력 줄이기 사업을 타이틀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

4. 충남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발굴 노력 필요

- 당진시 석문방조제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용역에 따라 수차례 반복
- 정확한 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

5. 충남의 특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

- 대규모 방조제를 이용한 풍력, 태양광 사업
- 대규모 장치산업 공장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사업
- 방조제 건설로 인한 인공호소,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태양광
- 석탄화력 주변의 회 처리장 기부체납을 통한 재생에너지, ESS 사업

6. 충남형 FIT

-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- 지역자원시설세 적극 활용

7. 충남에너지위원회 개선

- 충남에너지위원회 위원 대부분 서부발전 기획처장, 중부발전 발전처장 등 발전사 인사
- 환경단체와 소비자 단체 쪽 위원 절대 부족
- 충남지역의 에너지 현황을 고려해 위원 구성 재편 필요

8. 가정용 태양광 패널 사업 지원

- 서울시, 성남시 등 가정용 태양광 패널 지원 사업
- 옥상형과 베란다형 설치비의 50% 지원

9. 준공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도 전력부족 시 가동

- 당진화력, 태안화력, 보령화력 2016~2017년 100만kW급 석탄화력 2기씩 모두 6기 준공 예정
- 준공했더라도 전기가 남는 상황에서 가동하지 말고 실제 전기가 부족할 때 가동해야 함